

1.

당헌·당규

1

정강·정책

1 정강·정책이란?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상의 중요한 방침.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구성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의 믿음	기본정책 - 10대 약속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①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② 산업화·민주화 역사 인식 계승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외거, 3·15 외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③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 실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간다.”

④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⑤ 소외계층을 위한 책임 강화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⑥ 튼튼한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지향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우리의 믿음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3.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공의 선이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믿는다.
5.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 변화에 앞장서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6.	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우리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8.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9.	우리는 정치가 정직하고 겸손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분립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기본정책 - 10대 약속

1.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2.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3.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4.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6.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7.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8.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9.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이렇게 출제 됩니다!

- ◆ 토론, 연설, 대화 등 다양한 정치 상황을 가정하고, 정강정책을 올바르게 해석하는지 판별하는 유형
- ◆ 입법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가정하고 정강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는지 판별하는 유형

TIP

정강정책 영역은 단순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당의 가치와 방향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됩니다.

연습문제

1. 정강정책은 당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 이 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다짐을 담고 있다. 아래 담화 중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

기현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은 정강정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다가올 미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약속을 담고 있어
재철 :	맞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명시했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 편법과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해.
경원 :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도 강조됐어. 당원이라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우택 :	선명성 역시 중요한 덕목이야. 보수라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에 대한 내용만 긍정해야 해. 민주화 같은 진보 진영의 해계모니에 좌우되면 안 돼
진석 :	통일 방안 역시 중요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북한과 무력충돌이라도 불사해야 해.

① 기현, 경원 ② 기현, 재철 ③ 경원, 우택 ④ 우택, 진석

2. 정강정책 중 <우리의 믿음>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래의 법안과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지은 것은?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표 :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여야 해. 독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견제하는 것이 옳다고 봐.

희룡 :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옳다는 것이야. 고작 독점 같은 이유로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어디에 있겠어? 독점규제법은 폐지되어야 해.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민 :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책임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
재형 :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야.

① (가) - 준표, (나) - 승민 ② (가) - 준표, (나) - 재형

③ (가) - 희룡, (나) - 승민 ④ (가) - 희룡, (나) - 재형

3.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이다. 다음 중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

재원 :	메가트렌드 예측이 경제혁신의 핵심이야. 우리 당은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혁신기술, 팬데믹 등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해.
미경 :	맞아, 규제 인식 전환 역시 필수적이지. 기업이 준법체계 등 규제를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권장하고, 기존의 사전금지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해.
용태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책임도 다해야지.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이야.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유력한 인재를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라도 기업으로부터 빼앗아 국립연구소로 묶어두어야 해.
현진 :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도 필요하지. 지역경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경제혁신의 정신이야.

① 재원 ② 미경 ③ 용태 ④ 현진

4. 다음 대화는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인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당원들의 토론이다.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와 **가장 먼** 내용은? ()

승호 :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은 법의 그늘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봐. 우리 당은 돈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해.
준우 :	맞아.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 법관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인규 :	좋은 의견이야. 하지만 법률도 서비스 아닐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죄를 감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주 :	배심 재판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효율적인 선진형 분쟁 해결 제도 도입도 필요할 것 같아.

① 승호 ② 준우 ③ 인규 ④ 연주

5. 다음은 국민의힘의 <10대 약속>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자의 연설 중 일부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에 비추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은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①**살아있는 권력을 경계하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을 돌아보십시오. 코드인사에 맞춰 사법부를 행정부의 산하기관처럼 부렸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정권교체입니다. 저는 지방선거 출마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부터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건강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②**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당내에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③**우리는 정부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청년이 학습한 것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 확대가 꼭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규제를 양산하고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④**권력을 획득해 언론을 장악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우리의 진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답]

1.④ 2.② 3.③ 4.③ 5.④

2 당헌·당규

지방선거 출마자가 알아야 할 당원 규정과 지방조직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1 당헌·당규란?

당의 헌법과 규칙으로, 당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과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2 당원 규정

당원의 자격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당원의 구분

○ 일반 당원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 절차를 완료한 자

○ 책임 당원

당비 규정에서 정한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책임 당원 자격 부여 특례 조항(★★★)

1.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당원의 권리

당원소환제	당원소환은 전체 책임당원의 100분의 20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토론요구 및 발안권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 수 있다. 당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를 시행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당은 책임당원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입당과 탈당

○ 입당

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 즉시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청을 할 수 있다.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지만,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 제출 즉시 발생해!



○ 재입당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Q. 징계처분자의 재입당?

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처분이나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어.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하지.

3 지방조직운영 규정

시·도당대회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 유권자 수의 0.05%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시·도당 대의원의 구성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당 소속 시·도지사
4.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9.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직역별로 선임된 직능대표
12.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시·도당대회의 기능

1.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
2. 당헌 제18조 제 20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
3. 시·도당위원장 선출
4. 공직후보자 즉, 시·도지사 후보자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시·도당 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당직자
9.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시·도당대회 위임사항의 처리
2.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처리
3. 시·도당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4.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
6. 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을 선임
7. 각급 선거인단 구성
8. 당원협의회 읍·면·동 운영위원의 행위 추인

광역의원총회&기초의원협의회

시·도당에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광역의원총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초의원협의회를 둔다.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는 기능·운영·소집 및 의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당원협의회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당의 지역 활동의 주체

○ 당원협의회 활동

1.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 지원
2. 시·도당 주관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지원
3. 지역 현안 파악 및 건의
4. 당세 확장 활동
5. 기타 시·도당 요청사항 지원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1.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 당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4. 당소속 시·도의회 의원
5. 당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 당 공천으로 출마한 당해 지역 후보자
7.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 읍·면·동 운영위원
8.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7인 이내의 추천 운영위원

연습문제

1. 다음은 (A)당원협의회 12월 기준 당원 현황 일부이다. 이 중에서 책임당원 신분인 자는 몇 명인가? ()

(A)당원협의회 당원 현황(12월)

번호	성명	나이	당원가입기간	당해 당비납부 횟수	비고
...
301	김○○	67	30개월	4회	-
302	양□□	27	2개월	1회	※ 시도당 운영 위원회의 의결 로 자격부여
303	이○○	54	120개월	0회	-
304	박□□	72	360개월	11회	-
305	최□□	23	4개월	0회	-
306	함○○	51	0개월	0회	※ 전직 공무원, 공직후보자 추 천신청,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회에 당비 납부 완료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2. 아래의 대화는 당원 규정 해석에 대한 토론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경호 :	당원은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으로 나뉘지.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여한 당원을 의미해.
도읍 :	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하고, 소멸은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된 후 7일이 지나야 이루어지지.
성동 :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요구 및 발언을 할 권리가 있어.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있다면 당은 담당기구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의무를 가져.
한홍 :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이나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① 경호 ② 도읍 ③ 성동 ④ 한홍

3. 다음은 시도당 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의 대화이다. 옳지 않은 내용은? ()

Q :	당의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주요 당무를 의결하기 위해 ‘시도당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시도당 대회의 대의원을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반영되어야 하지요?
기호 :	우리 시·도당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 소속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석기 :	시·도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당직자들 역시 참여 대상입니다.
은혜 :	대의원 구성원 수는 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대 인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회경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정치중립성 유지를 위해 참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기호 ② 석기 ③ 은혜 ④ 회경

4. 다음중 당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②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당원교육 및 당원집회 등 당세 확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시·도당, 중앙당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당원협의회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직선거에 당선된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5. 아래의 명부는 어느 당직자가 명부상의 직책을 기준으로 각 인원을 광역의원총회 소속 또는 기초의원협의회 소속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잘못 분류된 인원은 총 몇 명인가? ()

〈기초 및 광역 의원 명부〉

번 호	성 명	직 책	분 류
...
11	민○○	가평군의원	광역의원총회
12	진□□	경기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3	최○○	서울시의원	기초의원협의회
14	이□□	대구시의원	광역의원총회
15	양□□	강원도의원	기초의원협의회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6. 다음은 어느 당직자가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조직운영 규정을 설명하는 강연 내용 중 일부이다. 아래의 강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사회자 :	그럼 강사님의 국민의힘 당규 중 지방조직 운영규정 관련한 강연이 있겠습니까.
강 사 :	<p>반갑습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p> <p>①국민의힘 시·도당대회는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당헌 제18조 제20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회 선출 등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시·도당에는 광역의원총회와 기초의원협의회가 있는 데요. ②광역의원총회는 원내대표 1인으로 구성되며 원내부대표는 별도로 둘 수 없습니다. ③한편, 기초의원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수인으로 구성됩니다.</p> <p>그렇다면 이번엔 당원협의회에 대해 알아보까요? ④당원협의회는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의 책임당원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원협의회의 활동범위는 무엇 일까요?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여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p>

[정 답]

1.③ 2.② 3.④ 4.④ 5.④ 6.②